
금융혁신지원 인프라구축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2022. 5.

금 융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핀테크지원 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정보에 대한 관리, 보안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
 -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최초 감사, 금융보안원은 직전 감사 2019.8월, 금융결제원은 직전 감사 2018.2월에 실시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감사기간 : 2021.9.1(수) ~ 9.17(금), 13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금융인프라 구축 관련 고유사업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회계, 조직·인력,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

□ 감사요원: 감사담당관 외 6명

□ 감사중점

- 핀테크지원 업무 수행 인프라 구축 여부 및 적정성
- 금융인프라 구축 관련 고유사업 등 주요업무 수행의 적정성
- 금융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안업무 추진 실태
- 정관 등 관련 규정 운영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 종전 금융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2. 감사결과 지적사항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 사업수행업무, 계약업무, 지출업무 미분리 운영

□ 2019.1.15.부터 매년 핀테크지원사업(국고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다양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2021.9월 현재 8개 세부사업 운영 중)

- 각 세부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나,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기도 하는데, 2019~2021.7월말 평균 용역사업의 비중은 49.6%임(2019년 38.2%, 2020년 55.5%, 2021.7월말 55.2%)

□ 용역사업의 진행 절차를 보면

- 입찰계약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입찰공고 시행계획(사업부서)→나라장터 등록(경영기획실)→업체선정평가(사업부서)→계약체결보고(사업부서)→사업집행, 검수(사업부서)→e-나라도움을 통한 자금 이체(사업부서*)로 이루어지고
* 단, 자금 이체 승인은 경영기획실장 권한

-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계약체결보고(사업부서)→사업집행, 검수(사업부서)→e-나라도움을 통한 자금 이체(사업부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단, 자금 이체 승인은 경영기획실장 권한

□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업무는 사업부서(담당자), 계약부서(담당자), 지출부서(담당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회계규정」에도 회계담당자와 계약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제6조, 제45조).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국고보조사업 집행 절차에서는 사업부서가 계약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 지출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 (제도개선)

2. 국고보조금 관련 요구자료 제출시 오류 방지 필요

□ 센터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결산 및 정산 등에 대한 내역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나, 자료에 오류 발생 사례가 있음

*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예산·결산관련 기관

○ 업무분장상 경영기획실이 예산·회계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각 사업 담당 팀(혁신지원팀, 산업기반팀, 창업성장팀)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경영기획실이 예산·회계 수치 검증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각 사업 담당 팀에서는 사업 계획, 예산 편성, 사업 집행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계약 및 지출행위는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며, 각 사업 담당 팀에서 집행 후 결산 및 정산을 수행하고,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를 제출받아 지출 금액과 결산 및 정산액이 일치하는지 및 예산액·결산액·정산액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체계로 업무 분장을 개편하고, 경영기획실의 검증 역할 강화를 통해 경영기획실이 예산·회계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할 필요 (제도개선)

3. 상임이사장 부임 등에 따른 정관 및 규정 개정 필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상임이사장이 새로 부임하였으나 정관 및 규정상 관련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핀테크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수가 지나치게 많고, 내역사업의 내용간 중복이 있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하여 '22년 예산안부터 내역사업을 통합·조정한바 아직 관련 규정에 미반영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상임이사 체계 도입을 반영하여 정관 및 규정의 용어를 통일하고, 22년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 확정시 내역사업 조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제도개선)

4. 인사운영체계 확립 필요

- 센터는 별도 규정을 활용하여 인사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직 이동 및 인사이동 시 세부기준 없이 내부결재로 진행되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보완할 필요
- 센터는 순환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센터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보직이동을 하거나 직원 요청에 의해 인사이동 실시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일반 행정직 등을 대상으로 인사운영 방식, 심의 절차, 예외사항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인사운영 체계 확립 필요 (통보)

5.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조정 필요

- 핀테크지원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2개의 내역사업에서(맞춤형성장지원프로그램, 핀테크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 ①금융규제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②맞춤형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③국민참여 핀테크 행사, ④핀테크 보안 지원, ⑤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⑥핀테크 일자리 매칭 지원, ⑦금융클라우드 지원, ⑧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 맞춤형성장지원프로그램에는 리더스아카데미(재직자 대상), 넥스트 리더아카데미(구직자대상) 프로그램을, 전문인력양성에는 Pre-인턴십 코스(대학생 대상), Fin-EDU(온라인플랫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맞춤형성장지원프로그램의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와 전문인력양성의 ‘Pre-인턴십 코스’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과 내용이 일부 중복됨

- 당초 교육과정 목적의 차이(취업연계/인턴십 매칭)로 인해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연계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통합 필요*

* 수강생 관리, 강사 섭외 등 운영과정의 효율성 제고

□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직자 과정을 통합 운영 필요

- 직무별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구직자 트랙 내 기획자·개발자 코스로 구분·운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기획자 코스) IT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 UI/UX 등을 중심으로 교육
 - (개발자 코스) 데이터 분석, Backend 개발, 해커톤 등 개발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조정(안)>

구분	기존('21년 기준)		조정(안)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	Pre-인턴십 코스	
목 적	취업연계	인턴십 매칭	취업연계
대 상	핀테크 분야 구직 희망자 (대학(원) 졸업자)	대학 재(휴)학생, 졸업(예정)자 및 1년 이내 졸업자	구직자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인 원	기획, 개발, 디자인 각 12명, 총 36명	기획 및 개발 각 25명, 총 50명	기획 및 개발 총 80여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온라인 교육 - 핀테크 비즈니스 개요 - 핀테크 비즈니스 실습 - 디지털마케팅과 UI/UX - 앱인벤터 실습 - 핀테크 비즈니스 기획 프로젝트 - 프로젝트 평가 및 수료식 -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온라인 교육 - 핀테크 동향 및 사례 - 비즈니스 매너 - 커뮤니케이션 스킬 -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실무 - 보고서 글쓰기 - 핀테크 서비스 기획, UX/UI 디자인씽킹 - 금융 IT 실습 - 해커톤(핀테크 서비스 기획/구현) - 인턴십 기업 매칭/연계 	<div>⇒</div> <p>[기획 코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비즈니스 개요 - 핀테크 비즈니스 실습 - 디지털마케팅과 UI/UX - 핀테크 서비스 기획, UX/UI 디자인씽킹 - 커뮤니케이션 스킬 <p>[개발 코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IT 실습 - 해커톤(핀테크 서비스 기획/구현)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교육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사업 통합 및 재조정 필요 (통보)

<금융보안원>

1. 데이터전문기관 정보집합물 파기 통지 절차 미흡

-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신용정보법」 제26조의4 제1항)
-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제6호에 따라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있으나

- 삭제 내역을 내부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결합의뢰기관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해 줄 필요가 있음

⇒ 금융보안원은 정보집합물을 파기, 부서장 보고 후 결합의뢰기관 담당자에게 통지(이메일 또는 SMS)하고,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통해 파기 확인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절차를 개선할 필요 (제도개선)

2. 상시평가지원시스템 및 레그테크시스템 자료 유출 우려

-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 *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의 접수, 금융보안원의 서면점검 및 점수·등급 표시,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송부
- 현재 다수의 금융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중임을 감안하여,
 -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담당자가 자택 내 개인PC 등을 통해서도 상시평가지원시스템에 평가항목별로 업로드된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중
- 상시평가지원시스템에 업로드된 증빙자료는 금융회사의 중요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외부 접근에 노출된 단말기에서 열람할 경우 중요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상시평가지원시스템에 업로드된 증빙자료들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는 접속환경 보안강화 대책을 적용할 필요
- 한편, 금융보안원은 레그테크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의 침해대응 및 비상대응 훈련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접수·관리하고 있는데
 - 상시평가지원시스템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담당자가 자택 내 개인PC 등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레그테크 홈페이지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중

- 레크테크 홈페이지는 금융회사의 침해대응 및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중요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 외부 인터넷망에서 접속이 가능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접근 또는 통제 절차를 보완할 필요

⇒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외부 접근에 노출된 단말기에서 상시평가지원시스템에 업로드된 증빙자료들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접속환경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레크테크 홈페이지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접근 또는 통제 절차를 보완할 필요 (제도개선)

3. 일부 문서 전자결재시스템 미등록 관리

- 금융보안원은 문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문서·접수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안전성 평가 결과, 비대면 실명인증 보안성 검증 결과를 목적 달성 이후 문서를 파기하여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금융보안원은 업무수행상 작성한 문서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문서 파기 등 사무처리 예외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제도개선)

4. 금융권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 운영대상 확대 필요

- 금융보안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금융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를 운영하고 있으나
 - 신고포상제 대상 취약점은 2019.6.1.부터 금융사이트에 접속시 사용자 PC에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연도별 신고 내역이 감소 중

* ('19) 26건 → ('20) 27건 → ('21) 7건

⇒ 금융보안원은 금융소비자 환경의 다변화 및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 환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제 운영 대상을 확대할 필요 (제도개선)

5. 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 내부통제절차(형상관리) 미흡

- 금융보안원은 기관 홈페이지 등 대외 11개, 대내 7개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내·외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자체 인력이 수정하고 있음
- 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를 수정·개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변경 내역을 관리하고 실제 운영시스템에 반영하기 전 관리자 승인을 받는 등 내부통제절차(형상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 팀장의 승인 절차 등 별도의 내부통제 및 변경관리 절차 없이 팀내 담당자 혹은 유지보수 인력이 수시로 운영시스템에 수정버전을 반영할 수 있어, 시스템 장애 추적 및 IT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금융보안원은 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변경이 관리자 승인 하에 운영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스코드 변경통제 등을 위한 내부통제절차(형상관리절차)를 마련할 필요 (제도개선)

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과 정보보호 상시평가 중복 해소 필요

- 금융보안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에 따라 금융권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MS-P)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회사 등은 자율보안 강화 노력 및 금융보안 관련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ISMS-P 인증을 취득

-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ISMS-P 인증을 위한 점검항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요구사항을 반영한 384개이고,
 - 정보보호 상시평가의 점검항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요구사항을 반영한 143개 항목인데
 - ISMS-P 인증과 정보보호 상시평가의 점검항목 등이 유사한 점이 많아, 평가대상 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금융보안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기관과 정보보호 상시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항목을 심사 또는 평가시 상호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조직관리 등에 활용할 필요 (통보)

<금융결제원>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재해복구 목표시간 단축 필요

- 금융결제원은 수행 업무에 대하여 업무 특성, 법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영향도를 분석하는 등 매년 재해복구 등급을 재산정하고,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 수준을 점검하고 있음
(「IT업무지속성계획 시행세칙」 제7조(재해복구등급 부여 및 변경) 및 제10조(관

리))

□ 오픈뱅킹공동업무와 관련하여 2019.10.30.부터 재해복구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하여 3시간 이내에 복구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 오픈뱅킹공동업무는 간편송금·간편결제에 활용되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같이 목표복구시간을 2시간 이내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중요지급결제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 환공동망)

⇒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공동업무의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동일하게 2시간 이내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제도개선)

② 오픈뱅킹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탐지정책 강화 필요

□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공동업무와 관련하여 이상금융거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탐지된 내역을 해당 이용기관에 전자우편 또는 전용채널(API 방식)로 공유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은 현재 오픈뱅킹 거래·조회 관련 총 6개의 API에 대한 17개의 탐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1.31. 이후로 FDS 탐지정책을 수정·보완하지 않음

○ 또한, 2021.5.31. 카드 관련 API 4개, 2021.7.30. 핀테크 선불 관련 API 4개 등 총 8개의 API가 추가되었으나 FDS 탐지정책을 개발·보완하지 않음

⇒ 금융결제원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부정사용 등 오픈뱅킹을 이용한 고도화된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FDS 탐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FDS 탐지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 (제도개선)

③ 오픈뱅킹공동업무 변경·승인 관리 미흡

-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따라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이용하는 업무를 추가할 경우 이용적합성 승인, 테스트 및 보안점검을 완료하고 이를 금융결제원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후 이용기관의 오픈뱅킹 API 추가 사용으로 인한 이용승인 내용 변경은 13건이 있었는데
 - 금융결제원은 13건 중 12건에 대하여 보안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 * 이용승인 내용 변경을 승인하여 이용기관이 보안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 * 금융보안원의 보안점검 결과는 금융결제원 승인 후 사후적으로 전자메일로 수신

⇒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승인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안 점검 실시 여부를 선행적으로 확인하여 보안점검이 누락된 상태로 서비스가 수행되지 않도록 이용승인 내용 변경절차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 (제도개선)

④ 데이터전문기관 정보집합물 파기 확인절차 미흡

- 금융결제원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데,
 -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제출된 정보집합물을 파기하고, 관련 기록(파기일, 파기담당자, 파기방법)을 ‘정보집합물 결합 처리 내역 대장’에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 중(「데이터전문기관 운영지침」 제32조(정보집합물 파기))
 - 현재의 정보집합물 파기 절차는 파기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용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음

⇒ 금융결제원은 정보집합물 파기 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고, 이용 기관에게 정보집합물 파기가 명확하게 완료되었음을 안내하는 절차를 추가할 필요 (제도개선)

⑤ 수의계약 내부통제 강화 필요

- 금융결제원 「회계규정 시행세칙」은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시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78조제1항제4호)
- 2018.1월~2021.8월까지 금융결제원이 체결한 총 585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 건수는 434건(74.2%)이고, 이중 수의계약 사유가 단순 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 건수가 271건(46.3%)임

⇒ 금융결제원은 수의계약 사유로 제78조제1항제4호의 금액 기준으로만 추진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통보)

⑥ 상품권 수령 증빙 미비

- 금융결제원은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창립기념일, 직원 생일, 퇴직시 등에 상품권 또는 물품교환권 등을 지급해 오고 있음(「복지 규정」 제16조의2*)
 - *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창립기념일 등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상품권 분실 또는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수령자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하나
 - 금융결제원은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상품권을 나눠 주면서 상품권 수령자 서명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있음

⇒ 금융결제원은 상품권 분실 또는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권 수령자 서명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추어 놓을 필요 (통보)

⑦ 이사회 구성의 다변화 검토 필요

- 지급결제 혁신, 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업무 범위와 참가 기관이 확대되고 있음
 - 업무 범위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서 오픈뱅킹시스템, 금융인증서비스, 마이데이터 중계 등으로 확대되고
 - 참가 기관은 기존의 은행 중심에서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 핀테크기업 등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
- 금융결제원 업무의 전문성·복잡성 증가 등으로 은행 외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 참가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탄력적이고 시의적절한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 구성·역할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 이사회의 구성이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현재 검토 중인 정관 개정(안)에서도 특별참가기관이 이사회에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

⇒ 금융결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원 등 금융위 소관 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역할·운영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변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 (통보)

⑧ 이사회 운영의 부적절

- 금융결제원 정관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이사회는 그 취지상 형식적인 투표보다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들 간의 토론 등을 통해 업무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중요함
- 민법에서 각각의 이사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58①)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59①)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 금융결제원 정관은 원장이 업무를 통할하고 단독으로 금융결제원을 대표(§24②)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어
 - 대표권이 제한되는 원장 외의 이사는 이사회만을 통해서만 금융결제원의 업무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회의 형식적인

투표 결과 보다 이사들 간의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중요하게 됨

- 금융결제원 정관이 원칙적으로 대면의결을 인정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취지도 이와 같음

□ 그러나, 금융결제원 이사회는 대부분의 이사회를 서면으로만 개최하여 금융결제원 정관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금융결제원 이사회 개최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전체 개최회수	9	10	9	5
대면의결	1	3	2	2

⇒ 금융결제원은 정관에서 별도 이사회를 둔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필요 (통보)